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7
----------	------

발의연월일 : 2020. 9. 7.

발 의 자 : 안민석 · 한병도 · 송재호
송갑석 · 양경숙 · 윤미향
윤재갑 · 서동용 · 조오섭
박성준 · 김영호 · 문진석
유정주 · 김민철 · 이수진^(비)
서영석 · 남인순 · 김승원
이용빈 · 윤건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일부장관은”을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고”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책무)</u></p> <p>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p>
<p><u>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생략)</u></p>	<p><u>제12조의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u></p>
<p>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u></p>
<p><u>4. (생략)</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④ <u>통일부장관은</u>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④ <u>통일부장관은</u>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고-----</p> <p>-----.</p> <p>⑤ (현행과 같음)</p>
---	---